

[오피니언]

데스크시각

박 치 경



한국 프로야구 최고의 유격수를 꼽으라면? 경륜상 김재박 LG 트윈스 감독을 필두로 KIA 타이거즈 이종범 선수와 삼성의 류중일 코치, 삼성 박진만 등이 있다.

그들이 특출한 수비능력을 발휘할 수 있었던 것은 뛰어난 센스 덕분이다. 동료 투수의 구질과 포수의 리드, 상대 팀 타자의 타격 특성을 분석해 타구의 방향을 예측해내는 감각이 남달라 그들은 출중한 수비를 할 수 있었다.

'울렁증'부터 벗어야

노련하게 경기하는 이들과 견주어 프로에 간 데뷔한 신인들은 대부분 '울렁증'에 시달린다. 신인들은 타석에 들어서거나 수비 포지션에서 섰을 때 웬지 가슴이 울렁증에 진다는 것이다. 잘해야겠다는 의욕은 앞서지만 출장하면 다리가 후들후들 떨리고, 그라운드가 앞뒤로 움직이는 것

같은 착각도 있다고 한다. 제발 내 앞으로 공이 오지 말았으면 하고 바랐다가 강력한 타구가 날아들면 간혹 어려를 범하고 만다.

지난 2월 25일 출범한 이명박(MB) 정

국민은 '프로 정부'를 원한다

부 5개월은 프로야구로 치면 신인들이 겪는 울렁증의 연속이었다는 분석이 있다. 이 대통령은 취임 이후 잇단 인선 잡음과 국민과의 소통 부재, 대외 여건 악화로 가슴이 답답할 만도 하다.

미국과의 자유무역협정(FTA)을 앞당기려는 과욕 때문에 빚어진 설비를 쇠하고 수입협상을 정부와 국민 사이를 가로막은 가장 큰 장벽이었다. 급변한 국제관계로 정부를 곤혹스럽게 했다. 북한은 콘

크리트 덩어리에 불과한 영변 원자력발전소의 냉각탑을 폭파하는 이벤트로 미국에서 식량 50만t의 선물을 받아냈다.

반면 강경책을 선택했던 우리 정부의 대북협상은 '통미봉남'(通美封南)을 노리는 북한의 카드에 말린 형국이다. 잘못하면 줄 건 다 주고 북한과 미국의 잔치를 면발치에서 바라보아야 하는 처지가 될지도 모른다. 여기에 금강산 해수욕장에서 터진 총성은 남북관계 전면 경색의 신호탄이 됐다. 언론은 연일 정부의 감각 부족과 뒤떨어진 응급상황 대처 능력을 문제

구 방향을 잘못 읽고 안타나 어려를 허용한 셈이다.

앞으로 한 달을 더하면 새 정부 출발 6개월이 된다. 열추 적응기간이 끌나는 셈이다. 전두환 전 대통령이 최근 박희태 한나라당 대표를 만난 자리에서 "연대장도 취임 100일까지는 봄주는 게 불문율이다"라고 했다지만 6개월 정도면 새정부도 울렁증이 점차 사라지고 정형화 단계에 들어갈 만하다.

이젠 제 뿌리 내릴 때

거의 몇 달 밤마다 캐진 쓰러비 비취준 국민의 소망이 무엇인지도 알았을 것이다. 세계경제의 흐름을 짚고 민생을 다독여 정부 권을 늘려야 앞날이 밝다. 잔꾀를 즐기는 북한과 일본에는 날쌘 수비수처럼 그들이 힘 길을 지키고 있다가 꼼짝 못하게 해야 한다. 패권 대결에 나선 미국과 중국의 노립수도 미리 읽고 있어야 손해보지 않는다.

국민은 진정한 '프로 정부'를 원한다. 이제부터는 아마추어나 신인선수처럼 우왕좌왕하지 말고 노련한 모습을 보여달라는 주문이다.

<체육·여론매체부장> unipark@kwangju.co.kr

독자고 환영합니다. 이름, 주소, 전화번호를 써주시십시오

501-711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 광주일보 오피니언 담당자/전화 062-2200-628/팩스 062-222-4918/e메일 opinion@kwangju.co.kr

온펜칼럼

김 병 인



1680일. 이 글을 쓰고 있는 오늘을 빼면 2013년 2월 25일까지 1680일이 남았다. 눈치 빠른 분들은 무엇을 의미하는 날 수인지 알게다. 바로 이명박 대통령의 날은 임기다.

지난해 초 임기가 1년 정도 남은 부시미 대통령의 퇴임시계가 인기리에 팔린다는 보도를 읽고 실소한 기억이 있다.

그런데 지금 인터넷에는 이명박 대통령 퇴임시계가 블로그와 미니홈피를 중심으로 퍼지고 있다.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부시야 그렇다 치고 취임 반년도 안 된 우리 대통령의 퇴임시계가 등장했다 하니 참담하다.

1680일은 끊임없이 대통령을 흔들고 추진하는 정책마다 국민적 반대에 부딪힐 것이다. 그렇게 1680일을 보내야 한다.

작금의 상황은 누구 책임일까? 대통령의 책임일까? 아니다. 원죄는 우리에게 있다. 그를 대통령으로 만들어 준 우리 책임이다. 전임 대통령에 대한 원망 때문에, 경제를 살려준다는 층면에 걸려 별다른 검증 없이 표를 던졌기 때문이다.

우리는 교훈을 얻어야 한다. 국민이 정치에 무관심하면 어떤 결과를 가져오

기 고

오 건 탁



21세기는 문화의 시대라고 한다. 이 말은 '문화'가 현재보다 훨씬 다양해지고 많은 학의를 가지는 것뿐 아니라 국가 발전의 주요한 성장 동력이 된다는 의미일 것이다.

그러한 맥락에서 광주에서 진행되고 있는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은 광주만의 문제가 아닌 국가의 문화산업 및 지역문화공동체 등을 목표로 하는 국가전략 사업의 일환이다.

하지만 최근 이러한 국가적인 전략사업이 새 정부 들어 많은 우여곡절을 겪는 모습을 보고 '설마', '혹시' 등의 불안과 불신을 넘어 '이번에도', '역시나' 등

인데, 지난 4월 18일에 있었던 예비당성 조사 중간보고에서 아시아문화중심 도시 사업의 법정계획에 들어있는 연구원의 광주 설립을 책임지지 못하는 결과가 나온 것이다. 다시 말해 CT연구원의 '설립 위치'에 대한 언급이 빠져 있는 것이다.

정부의 이런 흐름은 유인촌 문화체육 관광부장관의 'CT연구원과 KAIST 내의 CT대학원간 협력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보겠다'라는 언급에서도 우려를 낳고 있다.

CT연구원은 설립부지 10만㎡, 연면적 4만1천㎡ 규모에 국비 1천200억 원

정치 무관심이 부른 비극 그리고 1680일

'오원위'로 대변되는 인수위 시절부터 불안했다. 결국 미국산 쇠고기, 고환을 집착이 부른 물가상승, 중국의 무례, 독도 사태로 이어지면서 사람 혼을 쑤놓고 있다.

여론조사 기관 리얼미터 발표에 의하면 18일 현재 이 대통령의 지지율은 17.8%다. 앞으로 누가 대통령이 되면 간접적인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 그동안 사과도 두 번이나 했고, '국민은 서둘러'는 말을 되풀이했다. 두 번째 대국민 사과는 처음 했던 그것의 재방송으로 작각했다면 필자만의 '오바'일까?

바닥을기는 지지율은 오를 기미가 안 보인다. 경제를 일으키겠다는 자신감도 보이지 않는다. 오히려 대통령이 '오늘 쇼크', '국가적 위기 상황'을 입에

는지 깨달아야 한다. 정치에 무관심한 것이 하나의 멋이 돼버린 세태지만, 우리가 잘 살기 위해서는 정치에 관심을 갖고 도덕성과 철학을 갖춘 지도자를 뽑아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또 다시 물대포를 맞으며 쓰러울을 들어야 하고, 치솟는 물가에 학원비를 걱정해야 한다.

어이없는 말이지만, 이제 우리들은 스스로 살 길을 찾아야 할 것 같다. 21세기를 사는 우리지만 20세기, 19세기로 돌아가기 위해 애쓰는 정부에게 기대할 것이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것 하나만 명심하기를 바란다. 1680일 후에는 또다시 이런 실수를 되풀이하면 안 된다는 교훈 말이다.

<서강정보대학 교수·2006년4월 수상자>

온펜칼럼은 매월 광주일보 '오피니언'면 기고자 중 최우수작에 수여하는 '온펜상' 수상자들의 모임인 '온펜클럽' 회원들의 기고를 싣는 코너입니다.

대학 교육 실무형 인재 양성으로 바꿔야

대학에서 실무형 인재를 길러낸다고 하지 만 많이 부족한 것 같다. 실제 대부분 기업에서는 신입사원을 재교육하고 있다. 기업은 그만한 시간·경제적 추가 비용을 지출해야 하니 경쟁력 측면에서 떨어질 수밖에 없다. 이는 근본적으로 학교의 교과과정이 현장과 밀접하지 않다는 것을 말한다.

예를 들어 토폭공학을 전공한 신입사원을 뽑아도 컴퓨터 설계를 제대로 할 줄 모르기 때문에 인턴으로 3, 4개월 이상 실무교육을 한 후 거기에 학습해야만 정식으로 입사할 수 있다. 학교에서 현장 중심의 실무교육을 받은 게 아니라 간단하고 누구나 따라 할 수 있는 것만 배웠기 때문이다.

4년제 대학에 있던 건축과를 기준 전문대학들이 기간만 줄여 가르친다거나, 4년제 대학은 애완동물과 등 전문대학의 인과를 도운다. 물론 본다. ▲이기철·광주시 서구 농성2동

초점을 맞추다 보니 빚어지는 현상이다. 이제는 순수학문이나 기초과학 분야가 아닌 경우 대학의 커리큘럼을 업계가 필요로 하는 인력양성 방향으로 다시 짜야 한다고 본다. 여기에 기업은 기업대로 앞선 기술을 가진 특성화된 대학들과 협력해 기존 직원을 재교육하는 데에도 투자를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다.

영국의 경우 기업이 필요로 하는 인력을 맞출 인재로 양성하기 위해 생산업체 매장 책임자가 대학에 들어와 강의를 하거나, 기업 실무자들이 과트타임으로 대학에 들어가 강의를 한다고 들었다.

우리 대학들도 일린 마인드로 학생들을 교육시켜 현장에 내보내 준다면 기업들이 실무 교육을 다시 시켜야 하는 번거로움과 시간·경제적 낭비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이기철·광주시 서구 농성2동

아래층서 태운 담배연기 위층선 간접흡연 피해

흡연은 직접 흡연도 나쁘지만 간접 흡연 역시 건강에 상당한 피해를 준다. 특히 비흡연자들은 다른 사람들이 피우는 담배 연기 를 간접적으로 마시는 것 자체가 고충일 수 밖에 없다.

필자는 아파트에 살고 있다. 그런데 아래 층 사람이 화장실에서 담배를 피우면 배수구 태운 후 들어온다. 퇴근후 씻기 위해 들어가거나 출근전 새벽에 일어나 용변을 위해 화장실에 들어갔다가 담배 냄새를 맡으면 구역질이 날 정도다.

필자도 담배를 피웠다가 8년 전 끊었다. 그래도 흡연 경험이 있는 필자도 고통을 느낄 정도니 아이들과 아내는 어떻겠나. 아

내와 아이들이 항상 이맛살을 찌푸리며 담배냄새에 힘들어 하길래 내가 아래층에 찾아가 부탁도 하고 사정도 해서 좀 나아지기 했다. 그러나 여전히 담배를 피웠다.

얼마 전에는 찰나 못한 아내가 찾아가 약간 짜증을 냈더니 담배연기 조금 나는 것을 가지고 뭘 그렇게 호들갑을 떠느냐고 하더라는 것이다. 정말 이웃간에 싸울 수 없어서 참는 것이지 너무 한다는 생각이다.

아파트 높은 층에서 담배를 피우기 위해 건물 밖에까지 나가기도 귀찮아 밭코니나 화장실에서 피우는 듯한데 그것이 다른 이웃에게 큰 피해를 준다는 생각을 왜 못하는지 애속하기만 하다. ▲이영석·광주시 동구 대인동

시 설

중앙행정기관 지방 이관 기본취지 살려야

행정안전부가 올해 안에 국토·하천, 해양항만, 식의약품 등 3개 특별행정기관의 업무와 인력을 광역자치단체에 이관키로 했다. 중앙부처 조직의 지방 이관을 통해 지방분권을 촉진하고 지역경계를 활성화한다는 것이다.

특별행정기관의 지방 이관은 지방자치제 시행 이후 처음이다. 지난 2006년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당시 7개 특별행정기관이 이관된 적은 있으나 광주와 전남 등 다른 시·도의 경우에는 없었다. 중앙부처권한의 지방 이양은 지방분권을 강화한다는 점에서 바람직하다.

중앙행정기관의 지방 이관은 이제 시작된다. 역대 정부도 지방 이관을 추진했지만 각 부처 및 관련 이익단체의 반발 등으로 시행하지 못했다. 이번 이관 대상은 특별행정기관 3개에 불과하지만 중앙부처권한의 지방 이양에 물꼬를 트 것이다. 정부는 앞으로 중소기업, 노동, 환경, 산림, 보훈 등 5개 분야의 업무도 단계적으로 이관할 방침이다.

턱없는 '값 올리기' 경쟁 철저히 단속하라

불가가 원가와 상관없이 무차별적으로 오르고 있다. 원가 상승요인이 없는 데도 물가 오름세와 인플레 심리에 편승해 무조건 가격부터 올리고 보는 '얌체 상훈'이 판치고 있는 것이다.

최근의 물가 급등은 기본적으로 사용유래없는 초고유가와 원자재 가격 상승이 주원인이다. 하지만 소비자물가가 생산자 물가에 비해 턱없이 높은 경우가 많다. 국제 원유 및 원자재가 급등을 막기 위해 경제부처에 떠넘기면 지방에 이관된 특별행정기관은 차액 '애물단지'가 될 수 있다. 정부는 앞으로 중소기업, 노동, 환경, 산림, 보훈 등 5개 분야의 업무도 단계적으로 이관할 방침이다.

물가 인상은 인플레 심리가 가장 위험하다. 당장 올리지 않아도 될 품목마저 막연히 가격이 오를 것이라는 생각에 무차별적으로 인상한다면 경제는 큰 혼란에 빠질 수밖에 없다. 이런 식의 물가 인상은 도미노가 이어진다면 서민경제가 수렁에서 헤어나지 못할 것은 너무도 자명하다.

정부는 고물가를 핑계로 '편법 인상'을 일삼아 제赤속부터 철저히 단속해야 한다. 소비자단체 등과 함께 원가 분석을 철저히 하고 가격 인상폭이 적정한지 조사해야 한다. 편법 인상으로 밝혀지면 세무조사 등 강도 높은 처벌을 통해 '얌체 상훈'을 뿌리뽑기 바란다.

국제유가의 고공행진, 기상이변 등으로 지구온난화가 재앙으로 떠오르고 있다. 지구온난화의 주범은 석유 연료에 가장 많이 포함된 온실가스. 우리의 총 온실가스 배출량은 이산화탄소로 환산했을 때 1990년 2억2천600만t에서 2001년 4억3천580만t으로 192% 증가했다. 오는 2020년에는 7억1천690만t으로 1990년보다 316%나 늘어난다.

현재 우리는 온실가스 규제 대상국에서 제외돼 있으나 오는 2020년이면 의무감축국으로 지정된다. 그 때는 1990년 온실가스 배출량에서 10% 감축한 2억360만t을 유지해야 한다. 이에 필요한 경비는 최고 277억 원 820억 달러

에 이른다. 이는 작년 국내총생산의 3% 수준이나 된다. 그럼에도 우리는 배출권거래시장이 없어 시장메커니즘에 의한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 관련 사업화가 부진하다.

이런 가운데 최근 영국이 '탄소 제로' 컴퓨터시스템을 운용하는 세계 최초의 정부가 되겠다고 선언해 눈길을 끌고 있다. ▲김우성 정치부장 wskim@kwangju.co.kr

탄소 제로 선언

이처럼 컴퓨터시스템의 탄소 제로를 선언한 것은 정부 부처가 탄소 감축 목표치

를 이행하지 못하고 있으며, 통신시스템이 가장 큰 이유라는 진단 때문이다.

오늘날 컴퓨터는 우리 생활에 없어서는 안 될 필수품이 돼 버렸지만 탄소 배출 폐해 또한 엄청나다. 그 폐해를 '제로'로 만들겠다는 영국의 선언이 성공을 거두기 전 세계로 확산되길 기대한다.

▲이영석·광주시 동구 대인동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여야 한다는 것이다.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여야 한다는 것이다.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여야 한다는 것이다.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